

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연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4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8월 일

발 의 자: 정연화, 박명순, 민영미, 구재평,
조정식, 윤혜선, 김윤환, 성해련,
박경희, 박기범, 김선임, 이군수,
조우현, 강상태, 박주윤, 김종환,
이영경 (이상 17명)

☐ 개정구분 : 일부 개정

☐ 개정이유

- 우리 의회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심사위원이나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공적심사 제척·회피 규정 마련
- 또한,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취소·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의회 포상의 명예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“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” 규정 신설(안 제10조의2)
-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“포상의 취소”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)

☐ 개정조례안 : 붙임

☐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☐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 없음

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-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(포상의 취소)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
3.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·제출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다만, 상장·감사장·공로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, 상장, 감사장, 공로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포상자의 사망, 실종,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0조의2(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인 경우</u> <u>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</u> <u>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p><u>제11조의2(포상의 취소)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</u> <u>2.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</u> <u>3.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·제출한 경우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</u>

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·감사장·공로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, 상장, 감사장, 공로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포상자의 사망, 실종,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.